

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

- (주요 내용) 건설교통부는 최근 건설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“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”을 발표함
 - 건설 수요 진작을 위해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, 내년도 SOC 예산 금년 수준 유지, SOC 민자 유치 사업의 조기 추진, 임대 주택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음
 - 건설업체 과다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기능에 의존한 퇴출 기준을 강화하고, 건설업체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공공 공사 선급 규정 준수하도록 유도함

구분	주요 내용
건설업 구조 개편	- 공사 이행 보증 활성화 · 금융 기관에 의한 건설업체 평가 강화 - 등록 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- 고부가가치화 유도를 위해 건설사업관리(CM) 활성화
발전 기반 확충	- SOC 투자 및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- 임대 주택 시장 활성화 -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로 신규 주택 수요 촉진
자금난 완화	- 공공공사 대금 담보 특별 신용 보증 제도 확대 -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한 별도 법인 설립 지원 - 해외 건설 공사 지원 대상 공사 확대 - 해외 건설 보증 수수료 경감을 위한 역외보증기관(SPC)설립

- (평가 및 과제) 장기적으로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나, 당면한 건설업 침체 현황을 극복하기에는 미흡함
 - 준농림지 폐지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연쇄도산이나 분양가 인상에 대한 대책이 미흡함
 - 가격 상승폭이 낮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보다는 초기 주택 구입 비용이 축소될 수 있도록 취득세,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택 수요 진작에 효과적임

(김선덕 연구위원 sdkim@hri.co.kr ☎ 3669-4039)

최근 주요 정책(2000. 9. 4 ~ 9. 21)

은행여신거래 관련 표준약관 개정 권고안 발표	금융감독원 (9.21)	- 담보대출시 설정료 은행/고객 분담, 가압류시 기한 이익 상실 요건 강화, 대출약정서 사본 고객 보유, 대리인에 대한 보증요건 강화, 기타 대출절차 간소화 등
도산기업에서 미지급한 휴업수당 보호	노동부 (9.17)	-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 제도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
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	노동부 (9.15)	- 기금 사용한도 확대, 기금해산시 잔여재산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원, 기금의 분할·합병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절차·기준 마련 -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
기본 및 실시설계 세부시행기준 제정 시행	건설교통부 (9.15)	- 주요 공공시설의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·실시설계 내용, 기간, 설계관리, 설계도서작성기준 등에 관한 시행기준을 확정·고시 - 또한 측량 및 지반조사 용역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도 마련
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	공정거래위원회 (9.14)	-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의 시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, 조사불응 시 이행강제금 부과, 부당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 적용 확대,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지분을 제한 적용제외 등 - 동 개정내용은 심의·의결을 거쳐 2001. 4. 1일부로 시행 예정
부실금고 인수자격 기준 강화	금융감독원 (9.14)	- 금고의 여유자금으로 신규금고를 설립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금고,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임직원이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징계가 예정되어 있는 금고 등에게는 인수자격을 주지 않기로 함
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방지 예산 지원	기획예산처 (9.9)	- 정보격차 해소: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확대 실시, 농어촌·중소도시 우체국 여유공간의 정보화 교육장 활용, 정보화교육시설 지원, 교육 자원봉사단 운영, 지역정보센터 추가 설치 등 - 정보화역기능 방지: 해킹대응기술훈련장 설치, 전자서명인증관리 사업 지원, 사이버 범죄수사 확대, 사이버범죄 처벌 강화 등
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제정	공정거래위원회 (9.8)	- 판단기준 구체화: 시장점유율, 진입장벽,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,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의 가능성,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, 시장봉쇄력, 자금력 등 7개 요소 - 가격의 부당한 결정,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,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,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에 대한 방해,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 등 남용행위 유형 예시